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최근 변화와 상생협력 방안

미래전략개발부 김규연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출범과 경제환경
- III.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최근 변화와 협력 수요
- IV. 상생협력 방안
- V. 맺음말

아세안은 2015년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시키면서 정치·경제 협력을 위한 ‘지역협력체’에서 결속력이 보다 강화된 ‘지역공동체’로 확대·발전해 가고 있다. AEC의 출범은 향후 아세안이 거대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AEC 출범 이후 아세안에서는 역내 연계성 제고가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그 밖에도 인프라 수요의 급증, 역내 생산네트워크 확대, 창업 생태계 태동,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도 같은 변화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이러한 변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국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경영·기술 분야의 경험과 전문 인력 부족, 제도·시스템 미흡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우리 정부는 ‘사람, 공동번영, 평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와 아세안 국가들의 수요와 역량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협력 주체인 정부, 공공기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협력 방식에 있어서는 인력과 기술 교류, 제도와 시스템 전수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하여 패키지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된다. 또한 협력 수단은 단순무역이나 현지 공장설립 등에 국한하지 않고, 합작투자자와 경영협력계약, 기술 라이선싱 등으로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상생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사회 기반 인프라 확충, 제조업 역량강화 및 고도화, 혁신성장 동력 확보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새로운 변화와 ‘한류’ 등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남방정책이 지속성과 적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머리말

한국과 아세안은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외교 정책의 축적이 미흡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아세안은 한국의 안보·경제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라는 인식이 강하였으며, 아세안 지역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지향점이 부재¹⁾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관계는 경제·외교 측면 모두 협력의 양적 증대가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아세안 국가들도 그동안 복잡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 경제개발 격차 등으로 하나의 지역 협력체로서의 응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점이 있다. 아세안은 1990년대부터 단일시장을 목표로 경제공동체를 구상하기 시작하였으나, 역내 국가들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 경제 개발 격차 등으로 인해 20여년이 지난 2015년이 되어서야 ①정치·안보, ②경제, ③사회·문화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한·아세안 경제협력 관련 연구는 주로 ODA나 FDI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손혁상·최정호(2008)에 따르면 한국의 對아세안 ODA는 ‘개발협력’보다 ‘경제협력’ 중심으로 공여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방향과 이념을 제시할 만한 철학이 부재하다고 지적하였다. 한국기업의 수출증가, 해외진출, 자원외교와 같은 경제적 실익을 우선 고려한 ODA공여는 ‘경제만 아는’ 국가 이미지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기점으로 아세안 연구는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가져올 경제적 기회와 우리의 대응에 관해 다루고 있다. 특히 광성일 외(2015)의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과 광성일 외(2016)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 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에서는 아세안 역내 산업·무역구조의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아세안 진출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現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 인도지역을 통틀어 ‘신남방’ 지역이라 일컬으며 동 지역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미·중·일·러의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켜 한반도 변영의 축을 완성하고, 외교를 다변화한다는 ‘신남방정책’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람, 공동번영, 평화(3P : people, prosperity, peace)’의 3P 전략을 제시하였다. 즉,

1) 이재현(2018), p.5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남방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효율이나 시장 추구, 또는 자원, 지식 추구형이나 위험회피 추구형²⁾ 등과 같은 우리 기업 위주의 일방적 수요에 기반한 해외진출 전략이 아닌, 상대국의 수요와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는 ‘공동번영’이라는 대전제 하에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진행 중인 역내 경제 환경의 변화 및 최신 트렌드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에 따른 협력 수요를 도출하고, 우리 경제의 수요와 역량에 맞는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등 양방향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신남방정책 추진의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생’이 가능한 협력모델 구성 원칙으로 협력 주체와 협력 방식, 협력 수단의 다변화를 강조하는 등 전략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파급효과가 큰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 과정과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환경을 정리해 보고, III장에서는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후의 최근 변화 및 그에 따른 협력 수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수요와 역량에도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도출해 보고, 그 틀 안에서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V장은 맺음말로 본문의 내용 요약과 함께 신남방정책의 지속성과 적극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2) 오인식(2002), p.60

Ⅱ.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출범과 경제 환경

아세안(ASEAN),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2017년에 창설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아세안은 그동안 정치·경제 협력을 위한 ‘지역 협력체’에서 결속력이 보다 강화된 ‘지역공동체’로 확대·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2015년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는 향후 아세안이 거대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1.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출범

(1) 아세안의 창설과 안보협력

아세안은 1967년 정치·안보의 목적으로 창립된 지역협력체이다. 1960년에 발발한 베트남전이 본격화되자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1967년 8월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은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ASEAN 창립선언(방콕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방콕선언에서는 ①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② 주변 강대국들의 동남아 패권 쟁탈에 대한 중립을 보장하며, ③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고, ④ 일본과 호주 등 해양 국가들과도 폭넓게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남아 역내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고 명시하였다. 아세안은 대외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경제협력을 표방하면서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인도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안보협력체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였다.³⁾

그러나 ASEAN은 창설 초기 개별 회원국들이 각기 국내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회원국 간 총체적 협력이나 공동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없었다. 베트남전쟁이후 미군 철수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각축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동 지역은 새로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ASEAN 회원국 사이에 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1971년 동남아 평화·자유·중립지대(ZOPFAN) 선언에 이어 1976년 2월 ‘아세안 화합선언(발리 선언)’과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등이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아세안은 창설 이후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경제협력을 주창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회원국 사이에 안보협력체로서의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p.28

성격을 보다 강화할 수 있었다.

이후 1984년 브루나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ASEAN 가입을 마쳤다.

(2)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공동체의 출범

아세안은 정치체제가 각기 상이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 베트남, 라오스, 브루나이는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국가, 나머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는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폐쇄적 권위주의의 중간지대에 있는 혼성체제로 분류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경제발전의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였으나 국가별 정치체제의 차이에 따라 수용시기, 방법 및 정도 등은 상이하였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인 1970년대 반도체 업체들을 유치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과 금융, 기술의 아세안 허브가 되었고,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들은 1980년대 중후반 수입대체 공업화에서 수출주도형 공업화로 전환하면서 비용대비 고효율의 강점을 가진 중간제조업 경제국가군이 되었다. 또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메콩 지역 국가들은 아직까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 생산기지 국가들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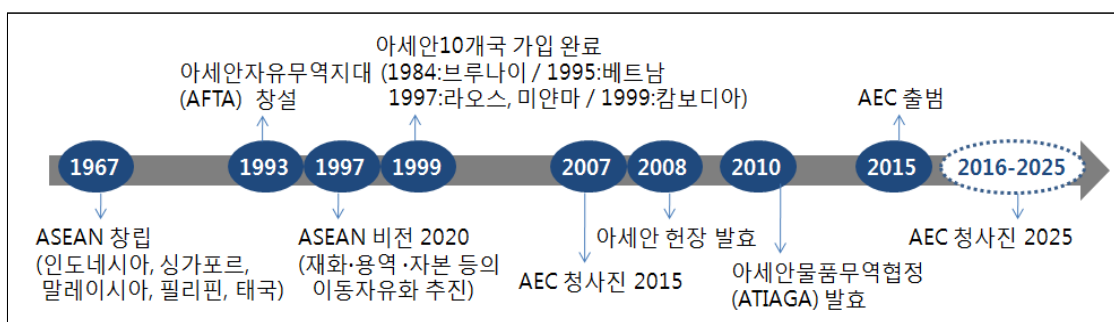
이러한 다양한 발전격차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지만 1990년대 냉전체제 종식으로 지역내 안보문제가 완화되고 경제 개발로 관심사가 이동하면서 점차 경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93년에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구성하고 역내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외부 경제·금융 충격에 대비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또한 2001년 12월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중국의 기술발전, 아세안-중 FTA 등을 통한 중국상품의 아세안 유입 증가⁴⁾로 아세안 국가들이 노동집약제품에 특화되어 경제성장이 지체되면서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요인은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아세안 공동체는 ①정치·안보, ②경제, ③사회·문화의 3가지 분야로 구분되며, 그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AEC)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4) 아세안의 중국 상품 수입은 2001년 5.9%에서 2016년 21.4%로 급증하였다.

위한 아세안의 노력의 결과이자, 美·中 강대국의 패권경쟁 구도 가운데 자발적으로 결성된 지역 경제공동체로서 특히 역사적으로 내부적 갈등과 개발 격차가 큰 아세안 회원국 간 ‘균형경제 발전’과 ‘지속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림 1〉 ASEAN의 발전 과정



자료 : 자체작성

(3)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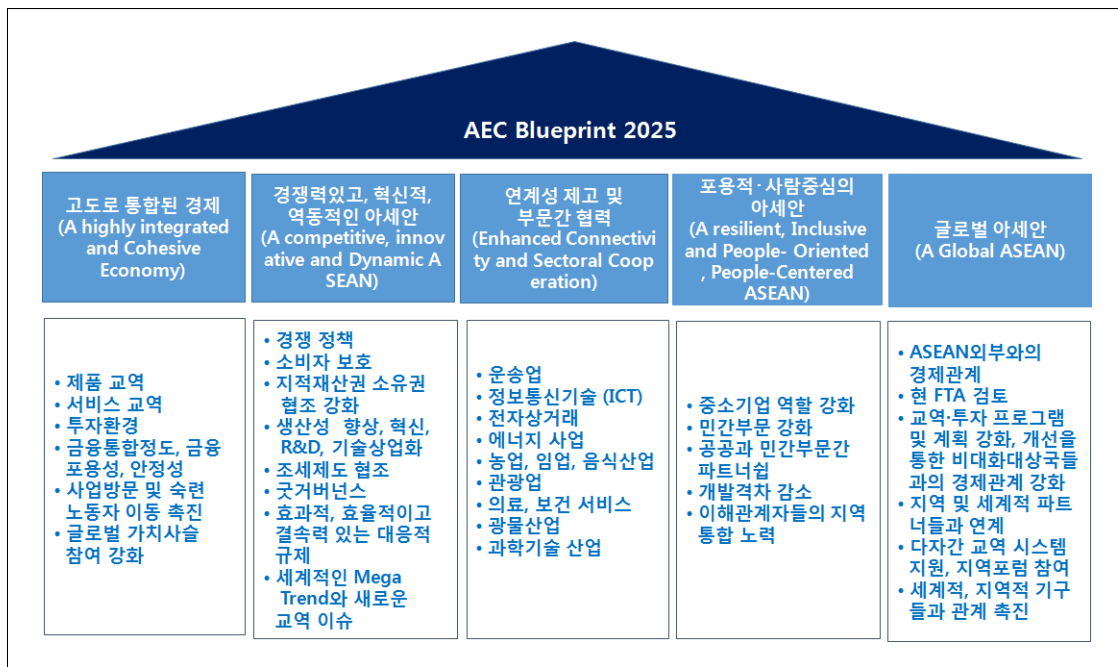
2007년 아세안 국가들은 2015년까지 단일 시장 및 단일 생산기반의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AEC 청사진 2015」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아세안 6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평균 관세율은 2007년 1.32%에서 2014년말 0.04%로 거의 철폐되었으며, CLVM(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국가의 관세율도 동기간 14.4%에서 1.3%로 크게 낮아지면서⁵⁾ 상품무역의 자유화가 진전되었다.

2015년에는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기존「AEC 청사진 2015」의 내용을 개선하고, ‘복원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등의 새로운 개념을 추가한 「AEC 청사진 2025 : Forging Ahead Together」를 제시하였다. 「청사진 2025」는 5개의 대영역 아래 35개의 중간범주의 목표가 있으며, 각기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전략, 주요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가지 대영역은 첫 번째, ‘고도로 통합된 경제(A 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Economy)’로 상품·서비스무역과 투자 자유화, 금융 통합, 숙련된 노동력과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글로벌 밸류체인과의 통합 등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A Competitive, Innovative and Dynamic ASEAN)’으로 효과적인

5)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국경간 무역 비용은 여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경쟁 정책,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협력 증진, R&D·기술개발·혁신, 조세 제도 협조, 굿 거버넌스, 효율적인 규제의 확립과 집행,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연계성 제고와 부문간 협력(Enhanced Connectivity and Sectoral Cooperation)’은 교통, 정보통신기술(ICT), 전자상거래, 에너지사업, 식량·농업·임업, 관광 등의 분야에서의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포용적·사람중심의 아세안(A Resilient, Inclusive and People-Oriented, People-Centered ASEAN)’에서는 중소기업 역할 강화, 민간 부문 강화, 민관협력체제, 개발격차해소, 이해관계자들의 지역통합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글로벌 아세안(A Global ASEAN)’을 내세우고 있는데, 역내 10개 회원국의 경제협력과 통합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 및 지역기구들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2〉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2025 청사진 5가지 대영역과 35개 중간 목표



자료 : ASEAN(2015)

2.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경제 환경

(1) 시장성

2017년 기준 총인구가 6.4억명(세계인구의 8.6%)인 아세안은 중국(13.9억명), 인도(13.2억명)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거대시장⁶⁾이다. 특히 2017년 기준 30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50.9%로 중국의 38.4%, 한국의 33.0%, 미국의 39.2%보다 현저히 높다. GDP는 2017년 기준 2.72조달러⁷⁾로 미, 중, 일, 독, 프, 영국(EU와 같은 지역 공동체 제외)에 이은 세계 7위의 규모이다. 아세안의 GDP는 아세안 10개국 체제가 시작된 1999년 5,765억달러와 비교하면 4.7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아세안 지역의 1인당 GNI는 국별로 차별화되나, 세계은행 기준⁸⁾에서 고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저소득 국가는 없다.

〈표 1〉 아세안 경제공동체 국가별 구매력 지표('17년)

	총인구(백만명)	GDP(십억달러)	1인당GNI(달러)
싱가포르	5.7	305.8	54,530
브루나이	0.4	12.0	29,600
말레이시아	32.1	309.9	9,650
태국	69.1	437.8	5,960
인도네시아	262.0	1,010.9	3,540
필리핀	106.3	321.2	3,660
베트남	93.6	216.0	2,170
캄보디아	16.0	22.3	1,230
라오스	6.7	17.2	2,270
미얀마	52.6	67.0	1,190
아세안	644.5	2,720.1	-
세계	7,530.4	80,683.8	10,366

자료 : IMF,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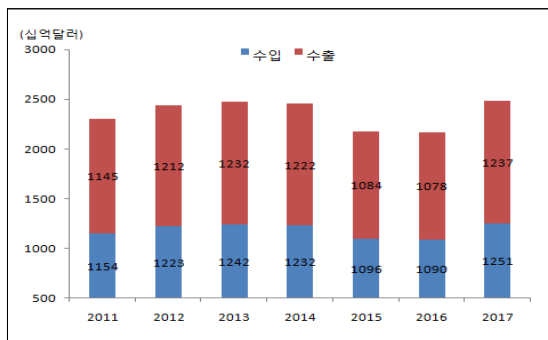
6)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2.6억명), 필리핀(1.1억명), 베트남(9.4천만명), 태국(6.9천만명), 미얀마(5.3천만명)의 순이다.

7)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1조달러), 태국(4,378억달러), 싱가포르(3,058억달러), 말레이시아(3,099억달러), 필리핀(3,212억달러)의 순이다.

8)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17년 기준 1인당 GNI가 12,056달러 이상인 나라들을 '고소득(high-income) 국가'로, 3,896달러~12,055달러는 '고중소득(higher middle-income) 국가', 996달러~3,895달러는 '저중소득(lower middle-income) 국가', 995달러 이하를 '저소득(low-income) 국가'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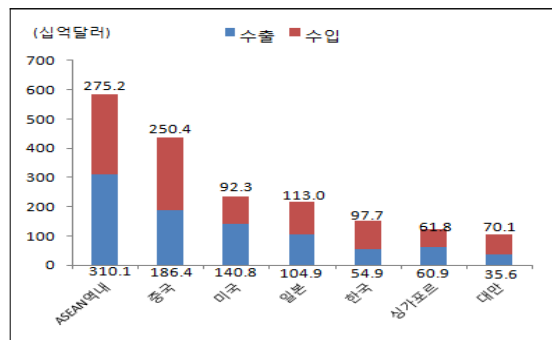
2017년 기준 아세안의 상품 교역 규모는 2.6조달러로 글로벌 교역 규모(35.8조달러)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역내교역이 전체 교역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對세계 교역시장에서는 중국이 수출 14.2%, 수입 1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전기·전자, 기계류, 광물성원료 등의 부품·소재인데, 부품·소재 비중이 높은 것은 아세안이 역내외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생산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높은 구매력과 활발한 무역능력을 갖춘 시장성이 뛰어난 경제권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아세안의 수출입 규모 추이



자료 : World Bank

〈그림 4〉 아세안의 對주요국 교역 규모('17년)



자료 : ASEAN stats

(2) 성장성

아세안 지역은 개발도상국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평균 이상의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2017년 기준 GDP 증가율이 세계 평균인 3.7%를 상회한다. IMF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18년 3.7%, 2019년 3.7%, 2023년 3.6%로 예상하는 가운데, 동기간 신흥공업국인 ASEAN-5⁹⁾는 각각 5.3%, 5.2%, 5.4%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대부분 국가들의 도시화율은 현재 약 40%에 불과하나, 도시인구 증가율은 2.4%로 세계 평균(2.0%)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소비계층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UN에서는 아세안의 도시인구 비중이 2017년 기준 약 40%에서 2050년 6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아세안

9)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다.

지역 국가들은 2016년 경제규모 대비 총투자 규모가 세계평균(23.2%)보다 큰 편으로, FDI 순유입 규모도 세계평균(2.4%)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¹⁰⁾. 아세안 국가들의 높은 구매력 증가율과 경제규모 대비 총투자 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아세안 경제공동체 국가별 구매력 및 투자 증가율('17) (단위 : 백만달러, %)

(%)	GDP			총투자	FDI 순유입
		도시화율	도시 인구		
싱가포르	3.6	100	0.09	24.9	25.0
브루나이	1.3	77.8	1.7	34.4	△1.3
말레이시아	5.9	76.0	2.2	25.8	4.6
태국	3.9	52.7	2.4	24.3	0.8
인도네시아	5.1	55.2	2.4	32.6	0.5
필리핀	6.7	44.2	1.4	24.6	2.7
베트남	6.8	34.9	2.9	23.7	6.1
캄보디아	6.8	21.2	2.6	21.7	11.4
라오스	6.9	40.7	4.0	29.0	6.3
미얀마	6.4	35.2	2.5	34.7	5.2
세계평균	3.7	54.7	2.0	23.2	2.4

자료 : ASEAN stats

(3) 안정성

아세안 국가들은 성장모멘텀이라는 장점과 정부의 관리 능력 제고로 경제적 안정성이 향상되었다. 2011년 20%이상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베트남도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난 10여년 동안 대부분 국가들의 실질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는 50% 이상의 환율상승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에는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 단, 정치불안 등의 원인으로 외국인투자가 감소한 태국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외국인투자 규제가 엄격한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선발국가 중심의 역내 FDI는 지난 5년간('13~'17년) 43.6% 증가하여 전 세계의 아시아 FDI(12.5%증가)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시현하였는데, 이는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점차 단일시장으로 진전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도적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해오면서 부패한 관료와 사회구조가 형성되고 경제활동을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자유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특히 2017년 아세안 50주년을 맞아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에서 약 2,200여명의 아세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패(47%)를 언급하고 있다.¹¹⁾ 제도적 변화의 속도를 의식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제도적 안정성은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표 3〉 경제 자유지수(2018)

	법 규율성			정부 크기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도			종합	순위
	지적 재산권	정부 신뢰도	재판 효율성	정부 소비	세금 부과	재정 건전성	사업 자유도	노동 자유도	통화 정책 자유도	무역 자유도	투자 자유도	금융 자유도		
싱가포르	98.4	91.2	90.9	90.6	90.4	80.8	90.9	92.6	85.2	90.0	85.0	80.0	88.8	2
브루나이	56.6	45.4	57.1	57.7	85.6	20.0	79.9	88.9	75.1	89.1	65.0	50.0	64.2	70
말레이시아	83.8	54.8	65.2	81.3	85.6	80.7	83.0	75.8	85.6	87.4	60.0	50.0	74.5	22
인도네시아	49.3	42.8	45.2	90.7	83.7	89.4	57.3	50.3	81.6	80.5	40.0	60.0	64.2	69
태국	48.6	34.7	45.3	85.5	81.3	96.4	77.2	62.6	75.5	83.1	55.0	60.0	67.1	53
필리핀	45.0	34.4	38.2	89.3	78.9	97.7	62.6	57.6	76.3	80.7	60.0	60.0	65.0	61
베트남	46.4	30.4	36.3	74.0	79.7	27.3	63.2	60.4	75.4	78.7	25.0	40.0	53.1	141
캄보디아	36.0	17.7	24.5	86.5	89.8	92.1	30.6	57.7	79.7	80.3	60.0	50.0	58.7	101
라오스	34.1	33.1	41.4	79.3	86.7	60.2	65.4	55.0	76.0	56.6	35.0	20.0	53.6	138
미얀마	-	-	-	-	-	-	-	-	-	-	-	-	-	-
세계 평균	52.2	42.6	47.7	63.9	76.6	67.5	64.9	58.9	76.3	75.9	57.8	48.6	61.2	-

주 : 180개 국가 기준, 50 미만은 Repressed, 50이상 60미만 : Mostly Unfree, 60 이상 70 미만 : Moderately Free, 70 이상 80 미만은 Mostly Free, 80 이상은 Free

자료 : 헤리티지재단

따라서 세계은행(WB)에서 발표하는 Doing Business Index(2018)에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선발 공업국들은 사업 용이성이 각각 세계 2위, 24위, 26위로 뛰어나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기타 신흥공업들은 각각 68위, 72위, 113위로 글로벌 경쟁력 대비 사업용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1) Ponciano Intal, Jr. et al.(2017), p.21

3.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교역 및 투자 동향

(1) 교역

한·아세안 FTA는 2003년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상품·서비스·투자가 동시에 추진되는 기존 FTA와는 달리, 상대국이 10개국으로 구성된 복수국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분야에 대한 협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은 2007년 11월 아세안 5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과 우선 발효¹²⁾되었으며, 2009년 6월 서비스협정, 2009년 9월 투자협정이 발효되었다. 한편, 베트남이 우리의 주요 교역 및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베트남과는 양자 FTA를 추진하여 2015년 12월부터 발효되었다. 다만 베트남은 아세안 후발가입국으로 분류되어 관세 인하·철폐 일정이 한·아세안 FTA상의 일정보다 비교적 늦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베트남의 일반품목군은 2018년에 관세철폐가 완료되고, 민감품목군은 2021년에 관세인하가 완료된다.¹³⁾

〈표 4〉 한·아세안 FTA의 관세 인하·철폐 일정

(단위 : 십억달러, %)

		베트남		한국, 아세안 6	
		비중(수입액)	철폐기간	비중(수입액)	철폐기간
일반품목군		76.9%	2018년까지 관세철폐	90% 이상	2012년까지 관세철폐
민감 품목군	민감	23.1%	2021년까지 0~5%로 인하	10%	2016년까지 0~5%로 인하
	초민감	(초민감품목수 : 200개)	2021년까지	(초민감품목수 : 200개)	2016년까지

주1 : 초민감품목은 5개 그룹(A, B, C, D, E)으로 나뉘며, 그룹별로 관세 인하 폭이 다르고 일부 품목은 양허 제외

주2 : 아세안 6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량은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유가하락 등으로 2015~2016년 감소하였으나 2017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표 5>를 보면 한국의 對세계 교역에서

12) 필리핀과는 2008년 1월 1일에, 브루나이는 2008년 7월 1일,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각각 2008년 10월 1일과 11월 1일에 상품협정이 발효되었다. 태국은 협상 내용과 국내문제로 협정 서명이 지연되다가 2010년 1월에 협정이 발효되었다.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7),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1에 기재된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 방식은 ①한국과 아세안 6, ②베트남, ③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국별 발전 정도에 따라 관세 인하·철폐 스케줄에 유연성을 부여하였다.(단, 2년간 유예기간 부여)

아세안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된 2010년 이후부터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¹⁴⁾을 보이고, 무역 흑자액 규모도 더욱 확대되었다. 2017년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액은 1,490.7억달러로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대상국이며, 국별로는 베트남(639.3억달러, 42.9%), 싱가포르(205.5억달러, 13.8%), 인도네시아(179.8억달러, 12.1%), 말레이시아(167.6억달러, 11.2%) 순으로 교역액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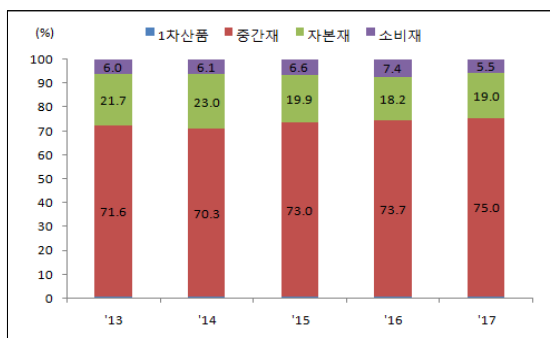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높으며 원료 수출의 비중은 매우 낮다. 특히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진출 활성화로 기계·설비 및 원부자재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對베트남 무역수지 흑자폭도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對아세안 수입은 여전히 중간재 비중이 높으나 수출에 비해 품목간 편차가 적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5〉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동향 (단위 : 십억달러, %)

	'01	'05	'07	'10	'13	'14	'15	'16	'17
수출액	16.5	27.4	38.7	53.2	82.0	84.8	74.9	74.5	95.3
수입액	15.9	26.1	33.1	44.1	53.3	53.4	45.0	44.3	53.8
총교역액	32.4	53.5	71.8	97.3	135.3	138.2	119.9	118.8	149.1
무역수지	0.6	1.3	5.6	9.1	28.7	31.4	29.8	30.2	41.4
對세계무역내 비중	11.1	9.8	9.9	10.9	12.6	12.6	12.4	13.2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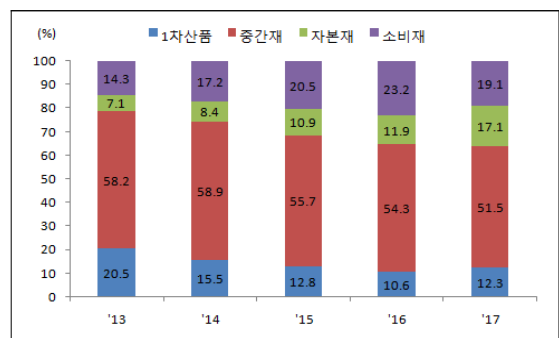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국제무역위원회(ITC)

〈그림 5〉 對아세안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자료 : UN Comtrade

〈그림 6〉 對아세안 가공단계별 수입 비중



자료 : UN Comtrade

14) 1990~2017년 사이, 우리나라의 對일본 교역비중은 23.1%에서 7.8%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동기간 미국에 대한 교역비중도 26.9%에서 11.3%로 감소한 반면, 對중국 교역비중은 1990년 2.1%에서 지속적인 확대를 기록하여, 2017년에는 22.8%까지 늘어났고, 아세안 교역비중은 1990년 7.7%에서 2017년 14.2%로 증가하였다.

〈표 6〉 한국의 對아세안 주요 수출품

(단위 : 십억달러, %)

	HS Code	'13	'14	'15	'16	'17
	전체 아세안 수출품	82.00	84.79	74.86	74.53	95.25
1	85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20.83 (25.40)	20.47 (24.14)	23.04 (30.78)	25.63 (34.39)	34.36 (36.06)
2	84 (기계, 장비, 도구)	6.95 (8.5)	6.71 (7.91)	7.56 (10.10)	6.93 (9.30)	10.12 (10.62)
3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17.15 (20.91)	19.12 (22.55)	10.28 (13.73)	7.27 (9.75)	9.35 (9.82)
4	90 (광학 측정 의료기기)	19.18 (23.39)	21.45 (25.30)	2.02 (2.70)	2.45 (3.29)	5.32 (5.59)
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7 (4.84)	4.05 (4.78)	3.87 (5.17)	4.06 (5.45)	5.07 (5.32)

주 : ()는 전체 아세안 수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국제무역위원회(ITC)

〈표 7〉 한국의 對아세안 주요 수입품

(단위 : 십억달러, %)

	HS Code	'13	'14	'15	'16	'17
	전체 아세안 수입품	53.33	53.43	45.04	44.31	53.82
1	85 (컴퓨터, 전자제품 및 그 부품)	11.10 (20.81)	11.70 (21.90)	11.07 (24.58)	12.12 (27.35)	14.72 (27.35)
2	27 (광물성 연료에너지)	19.94 (37.39)	17.18 (32.15)	9.92 (22.02)	7.80 (17.60)	9.25 (17.19)
3	84 (기계, 장비, 도구)	2.51 (4.71)	2.88 (5.39)	3.31 (7.35)	3.76 (8.49)	5.98 (11.11)
4	62 (의류, 악세사리)	1.97 (3.69)	2.48 (4.64)	2.35 (5.22)	2.36 (5.33)	2.69 (5.00)
5	90 (광학 측정 의료기기)	0.94 (1.76)	1.13 (2.11)	1.16 (2.58)	1.21 (2.73)	1.78 (3.31)

주 : ()는 전체 아세안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국제무역위원회(ITC)

(2) 투자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1981년 해외직접투자 규제완화 이후, 대미 우회 수출 목적의 투자가 주류를 형성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중국 제조업 대체 및 아세안 역내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 대중 투자를 추월하였다.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액은 2017년 기준 총 48.5억달러(신고기준)에 달하여 미국(137.5억달러), 케이만군도(70.7억달러)에 이어 아세안이 제3의 해외투자 대상지역이 되고 있다. 2008~2017년 누계기준으로는 베트남(136.6억달러, 12,811건, 제조업 중심)이 1위, 그 뒤로 싱가포르(79.0억달러, 2,187건, 도소매업 중심), 인도네시아(73.6억달러, 3,855건, 제조업과 광업) 순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185.5억달러, 13,504건), 광업(74.5억달러, 588건), 금융 및 보험업(43.9억달러, 603건), 도매 및 소매업(34.3억달러, 3,388건) 순이다. 전반적으로 투자 국가 및 업종은 다변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베트남과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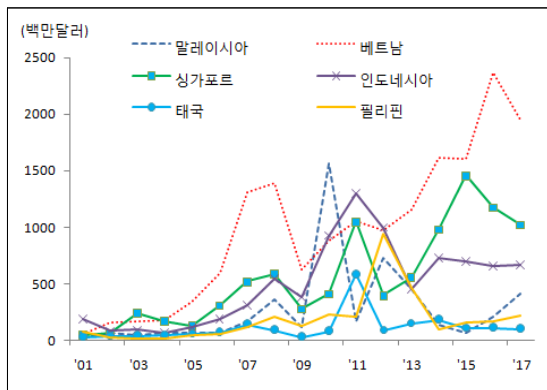
〈표 8〉 한국기업의 對아세안 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건, 신고기준)

	'12	'13	'14	'15	'16	'17
투자금액	4,575.0	3,887.1	4,151.6	4,404.4	5,323.2	4,848.7
투자건수	2,308	2,717	2,816	3,051	3,678	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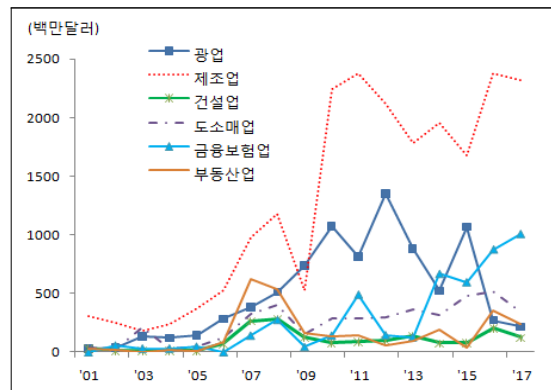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7〉 對아세안 국가별 투자 추이



주 : 투자금액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8〉 對아세안 업종별 투자 추이



주 : 투자금액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기업 규모별로 보면, 2017년 기준 중소기업의 투자비중이 26.1%, 대기업이 69.2%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1990년대 초기의 저부가 전자부품, 섬유, 의복 중심의 투자에서 2000년대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에서 대기업과의 동반투자가 확대되었다.

〈표 9〉 기업규모별 對아세안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						
	1990	1995	2000	2010	2015	2017
대기업	67.9	81.1	75.6	84.7	74.7	69.2
중소기업	29.1	18.3	21.9	12.6	22.4	26.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또한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매출 현황¹⁵⁾을 살펴보면, 현지매출과 제3국 매출 비중이 소폭 높아졌으나, 중국이나 미국 등 타지역과 비교하면 현지매출 비중이 여전히 낮다. 또한 매입구조는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매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0〉 對아세안 현지법인 매출입 구조(%)

구분	'12	'13	'14	'15	'16	
현지법인수	1,115	1,285	1,322	1,465	1,583	
매출	현지	48.3	50.2	51.6	50.2	48.5
	한국	33.5	25.7	26.1	23.6	28.9
	제3국	18.2	24.1	22.3	26.2	22.6
매입	현지	32.7	37.7	37.7	35.1	36.1
	한국	32.8	38.9	38.9	42.0	40.3
	제3국	34.4	23.4	23.4	22.9	23.6

주 : 투자금액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8)

〈표 11〉 아세안·中·美 현지법인 매출입 구조(%)

구분	아세안	중국	미국	
매출	현지	48.5	64.4	88.3
	한국	28.9	30.5	15.1
	제3국	22.6	5.1	10.2
매입	현지	36.1	60.9	32.5
	한국	40.3	28.7	60.2
	제3국	23.6	10.4	7.3

주 : 2016년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8)

15) 도현철(2018), p.37-44

Ⅲ.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최근 변화와 협력 수요

1. 아세안 연계성 제고

아세안 국가들 간 역내통합과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연계성¹⁶⁾ 제고’가 주요 아젠다로 부상하였다. 아세안 연계성 제고는 아세안의 통합협력 증진과 주요 세계 경제 주체로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에는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18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¹⁷⁾(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이하 ‘MPAC 2025’)이 채택되었다. ‘MPAC 2025’에서는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의 3개 부문과 5개의 전략 분야에 집중된 15개의 이니셔티브를 선정하였다.

〈그림 9〉 MPAC 2025의 5대 전략 분야 및 15개 이니셔티브

인적 연계성	물리적 연계성	제도적 연계성
지속가능 인프라	①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선정과 구체적 자금조달처 확보 ② 아세안 인프라 플랫폼 구축 ③ 지속가능한 아세안 도시화 전략 수립	
디지털 혁신	① 중소기업 기술플랫폼 증진 ② 아세안 오픈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③ 아세안 디지털금융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④ 아세안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원활한 물류	① 무역 루트 및 물류 향상을 통한 아세안 경쟁력 강화 ② 주요 애로사항 해소로 공급망 효율 개선	
규제 혁신	① 3대 우선 상품군 표준, 상호인증제, 기술규제 통일 ② 비관세조치 감소를 위한 투명성 및 평가제도 강화	
인적 이동	① 정보검색 원활화 ② 비자 절차 개선 ③ 국별 상황에 맞춘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공동 자격증 ④ 아세안 회원국간 고등교육 교환 제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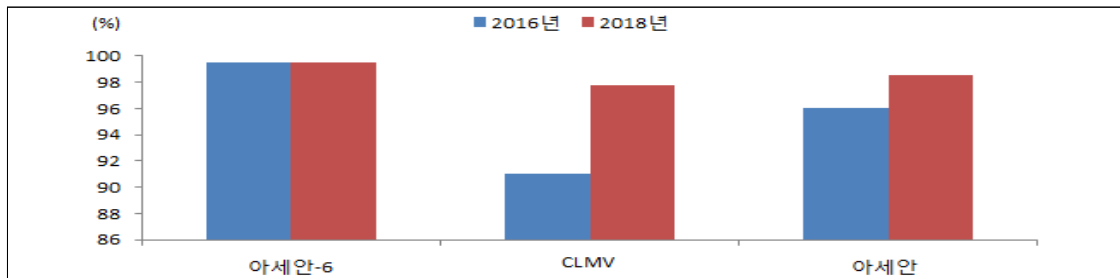
자료 : ASEAN Secretariat(2016)

16) 역내 물자, 서비스, 투자, 사람들 간 교류의 가능성 및 정도를 일컫는다.

17)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개발협력 사업인 GMS(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유역 프로그램)를 계기로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한 역내 협력이 시작되었으며, '10년 1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2010)’을 채택한 바 있다. MPAC 2010에서 보다 구체화된 형태의 추진체제로 발전한 것이 MPAC 2025이다.

물리적 연계성 제고를 위한 이니셔티브로는 아세안 고속도로 네트워크 완성, 싱가포르-쿤밍 철도 연결 프로젝트 완성, 아세안을 동아시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되고 원활한 복합물류체계 구축, 아세안 회원국별 ICT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가속화 등이 있으며, 제도적 연계성 제고를 위한 이니셔티브로는 물류활성화 관련 기본협정 실행, 아세안 단일 항공시장(ASAM) 및 단일 해운시장 개발, 역내 상품무역 장벽 철폐로 아세안 상품무역 자유화 촉진, 국경관리 역량 증진 등이 있다. 또한 인적 연계성 제고를 위한 이니셔티브로는 아세안 회원국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 아세안 회원국간 인적 이동 증진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인 분야는 상품무역의 자유화로 무관세 품목은 최근에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림 10〉 아세안 경제공동체 역내 무관세 품목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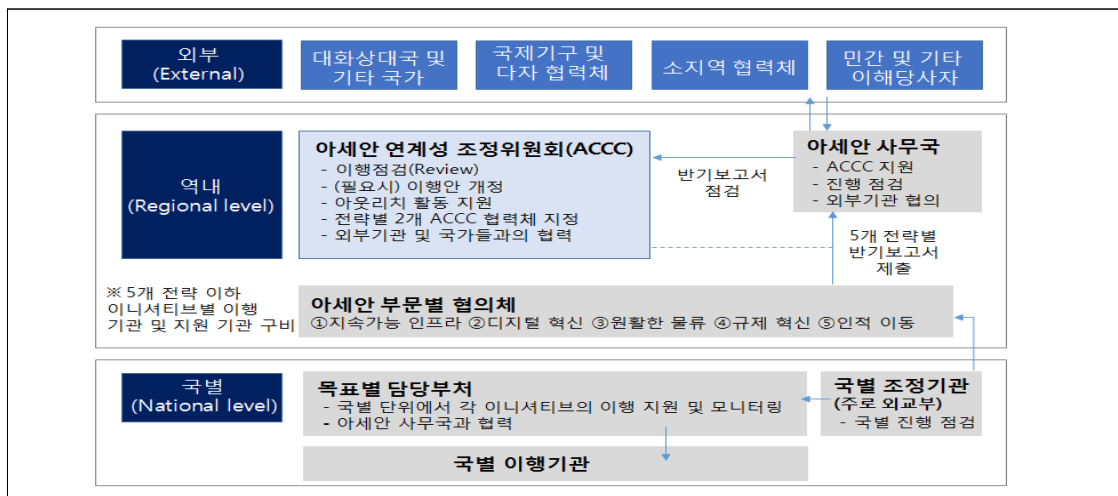
주 : 아세안-6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CLMV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자료 : OECD(2018)

MPAC 2025는 주아세안 상주대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ACCC :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mmittee)’와는 별도로 다수의 목표별 담당부처(National Focal Point)를 지정하여 실제 사업 이행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아세안 연계성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이니셔티브 특성에 따라 계획(2016~2017년), 1차(2018~2020년)·2차(2021~2025년) 이행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모니터링의 경우에는 이행여부 점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투입(Input), 결과(Output), 성과(Outcome)별 다층적 정량평가를 하고, 반기별 사업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실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세안 연계성 사업이 실제 이행 단계에서는 자금조달, 정책결정, 이행여건 등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자금조달의 경우, 물리적 연계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상 수익률이 높지 않고, 리스크가 큰 대규모의 초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많아 민간투자 유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아세안 일부 국가들은 정부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이 부족¹⁸⁾하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아 다자협력기금, 연기금, 채권시장 등의 활용이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아세안 연계성 사업들이 대부분 하향식(top down)으로 설계되어 실행국 간의 인식차가 크고, 민간기업들에게 그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민간기업의 투자를 충분히 유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 정책 결정의 경우, 서로 다른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국가 간 혹은 국내 관료 및 기관과의 갈등으로 프로젝트 이행의 우선순위 조정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역내 인프라 프로젝트의 국가 간 이익 배분 갈등과 무역 자유화를 위한 National Single Window 구축 관련 무역 관료와 국가 규제 기관과의 갈등 또한 존재한다. 아세안 국가의 평균 관세율은 2000년 8.9%에서 2016년 4.5%로 낮아졌으나,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어 동기간 비관세조치 건수는 1,634건에서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였다. 셋째,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기술 보유 및 숙련된 노동력 부족, 관련된 표준, 지적재산권, 프로토콜 등의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 아세안의 여러 국가들이 규제 승인을 위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부족하고, 상업적 협의를 위한 확립된 기본 협정이 부재하여 초국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ACCC)는 주요 대화상대국들과 ‘ACCC+1’의 형태로 연계성 협의회를 설치하여 대화상대국(Dialogue Relationship)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11〉 MPAC 2025 이행 체계



자료 : ASEAN Secretariat(2016)

18) Financial Times(18.5.28), 최근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말레이-싱가포르 고속철도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였다.

2. 인프라 수요의 급속한 증가

아세안은 국경간 연계성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의 높은 인구증가율, 도시화율,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트렌드 지속으로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건설, 산업공단 육성, 경제특구 건설 등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 투자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BMI(2017.9)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는 3.63조달러 규모의 5,041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 중 아세안은 약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125%의 성장세가 전망된다.

아세안 사무국의 발표에 따르면, 아세안은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1,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별 상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90.3억달러를 배정하였는데, 이는 2016년의 237.7억달러 대비 22.14% 증가한 규모이며, 태국은 ‘인프라 개발전략(2015~2022년)’을 기반으로 물류 및 운송비 절감을 위해 534억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중장기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민관합동(PPP) 방식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으로부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은 부족한 정부재원으로 인해 국영기업 주도 개발보다는 PPP와 같은 민간 주도형 개발을 확대하고자 하며,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는 빈약한 국가재정으로 해외 원조자금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표 12〉 아세안 지역 인프라 투자액 수요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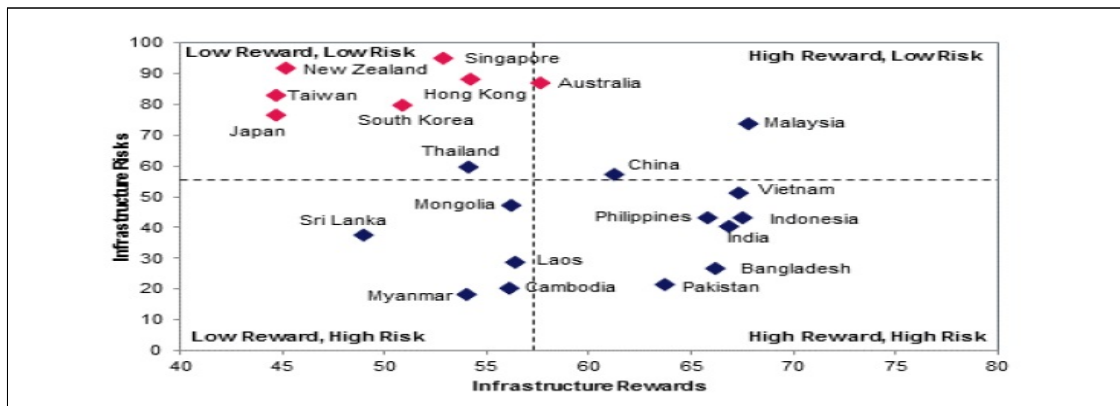
	ADB-ADBI	Mckinsey	KPMG	Bhattacharyay	Goldman Sachs	UNCTAD
추정 연도	2009	2013	2014	2012	2013	2015
연간 투자액 수요 (십억달러)	60	133	146	100	69	110
분야	전력, 교통, 통신, WSS	전력, 교통, 통신, WSS	-	전력, 교통, 통신, WSS	전력, 교통	전력, 교통, 통신, WSS
기간	'10-'20	'14-'30	'13-'30	'10-'30	'10-'30	'15-'25
해당 국가	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아세안 모든 국가	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브루나이, 싱가포르 제외	인니, 말련, 필리핀, 태국	아세안 모든 국가

주 : WSS=Water Supply and sanitation (급수 및 위생 : 수자원 관리)

출처 : UNCTAD(2015)

다만 아세안 지역 국가들은 인프라시장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의 불안정성, 구조화된 정책 체계 부족, 관료들의 부패, 숙련된 매니저나 기술자 부족 등으로 인프라 개발 사업이 종종 지연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세안 지역은 대부분 高위험·高수익 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2〉 아태지역의 위험/수익지수



자료 : BMI Research

BMI Research에서 발표하는 위험/수익지수(RRI)가 높은(위험대비 보상이 큰) 국가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이다.

〈표 13〉 신남방지역 인프라 위험/수익지수(RRI : Risk/Reward Index)

	산업 보상	국가 보상	보상	산업 리스크	국가 리스크	리스크	RRI	지역 순위	세계 순위
인도	76.9	51.9	66.9	20.0	60.3	40.1	56.2	7	38
싱가포르	48.7	59.3	53.0	97.9	91.4	94.7	69.6	2	6
브루나이	-	-	-	-	-	-	-	-	-
말레이시아	74.7	57.7	67.9	72.1	74.7	73.4	70.1	1	4
태국	61.2	43.5	54.1	57.9	60.8	59.4	56.2	6	37
인도네시아	74.4	57.3	67.5	28.8	56.8	42.8	57.7	4	32
필리핀	72.4	56.0	65.8	36.7	49.5	43.1	56.8	5	34
베트남	78.8	50.2	67.4	45.5	56.9	51.2	60.9	3	19
캄보디아	67.6	38.8	56.1	14.6	25.4	20.0	41.7	9	84
라오스	64.1	45.0	56.5	29.2	27.5	28.4	45.2	8	72
미얀마	59.0	46.7	54.1	19.6	16.2	17.9	39.6	10	89
세계 평균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아시아 평균	61.2	51.5	57.3	52.5	58.6	55.5	56.6	-	-

주 : 100점 만점 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리스크 낮음

자료 : BMI Risk/Reward Index(2018, 3Q)

3.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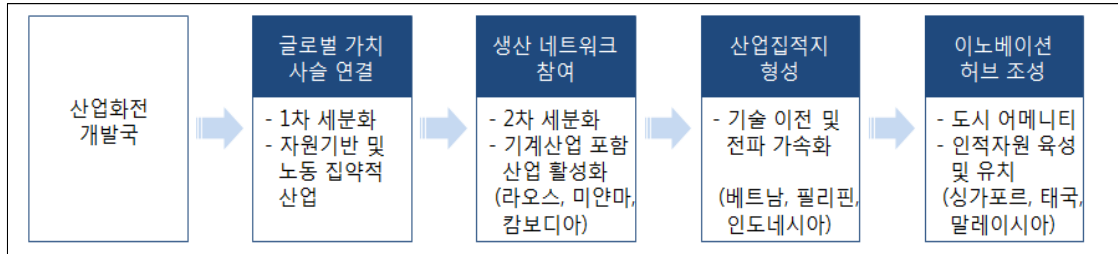
아세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유리한 지정학적 요인, 안정된 정치 환경 및 개방된 무역정책, 세제 혜택 등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아시아 제조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제조업 생산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확대,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등 정부의 전략적인 육성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2014년 ‘2025년까지의 산업발전 전략과 2035년 산업 비전’을 발표하였는데, 동 정책은 가공·제조업 분야를 우선 발전부문으로 선정하고,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질적성장 전환을 도모하여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제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부품·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세제혜택과 저금리 대출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경제발전 가속화 및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를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은 경제개발 회랑을 근간으로 주요 산업을 선정하고 회랑간 연계성을 구축하는 방식의 산업정책을 채택하였다. 2014년에 발표한 신산업법안(New Industrial Bill)에서는 국내 가공산업 발전, 중소기업, 민간기업 지원 금융, 산업단지 개발, 전략산업 통제¹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McKinsey Global Institute(2014)에서는 아세안의 경제공동체 출범이 역내 다양한 비교우위를 활용한 국경간 생산 네트워크 혹은 분업체계 구축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축소되고 무역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들은 각 공정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곳에 생산 공장을 세울 수 있어 역내무역이 더욱 증가하고 복잡화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 역내 생산 네트워크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각국별 산업화 차이에 따른 가치사슬의 구성을 보면,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활성화로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추구하고 있고,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는 선진 기술이 이전되고 산업클러스트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은 고급기술들이 국내화되어 융·복합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바, 기획·설계, 개발, 조립·생산, 판매 등 단계별로 현지 여건에 상응하는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9) ADB(2014)에서는 동 법률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채택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이 보호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추론을 하고 있다. AEC출범에 대비해 역내국가들과 협력하거나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준비하기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림 13〉 ASEAN 각국별 산업화 차이에 따른 가치사슬의 구성



자료 : KIEP(2015),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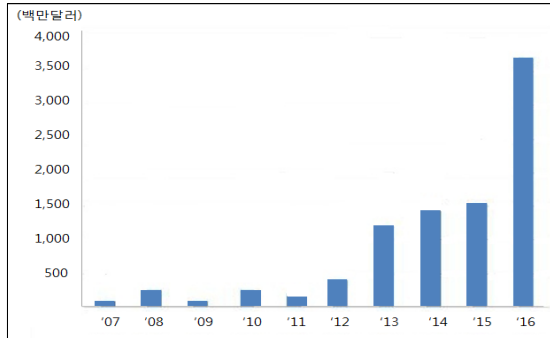
다만, 현재 베트남에는 약 1,000여개의 부품·원자재 생산 현지기업들이 있으나 발달 수준이 미미하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투기업들의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외투기업들의 베트남 국내에서의 부품·소재 조달율은 3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세안 최대 투자국인 우리나라의 아세안 현지법인의 매입구조는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매입 비중이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으로, 베트남 현지 중소기업들은 한국 기업 주도의 생산 네트워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진출 한국 기업들이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이 동반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對베트남 투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현지 기업과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전략수정 및 현지 기업과 발전 협력 수요가 존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4. 창업생태계의 태동

최근 아세안은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실험실로 거듭나며 유망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서 아세안의 선발 공업국들은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벤처 캐피탈의 對아세안 투자액은 연평균 53.8% 증가하였으며, 2016년은 전년대비 138.7% 증가한 36억달러를 기록²⁰⁾하였다. 특히 2012~2017년 5년간 아세안 스타트업 투자 중 절반이 싱가포르(664건)에 집중되었으며, 다음으로 인도네시아(310건), 말레이시아(155건), 태국(114건) 順으로 투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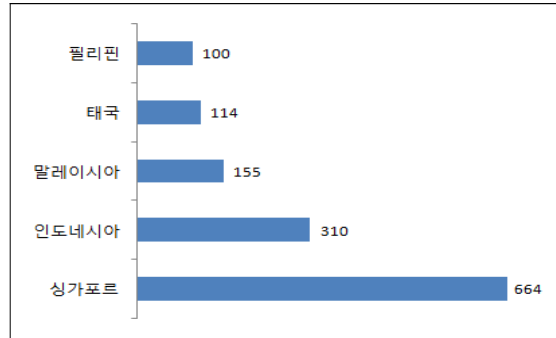
20) 한국무역협회(2018), p.4

〈그림 14〉 VC 對아세안 투자 동향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8), p.4

〈그림 15〉 스타트업 투자 건수('12~'17)



주 : 2017년은 2017.9.13일까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8), p.4

한편, 아세안은 국별로 특색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어 스타트업 메가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싱가포르를 기업설립 및 투자유치가 용이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아세안 지역본부 다수가 집결하여 아시아의 핀테크 산업 및 블록체인의 허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구축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혁신 전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²¹⁾하고 있다. 태국은 전 세계 디지털 노마드²²⁾들의 창업준비를 위한 훈련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저렴한 초기자금 조달이 가능하여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에 유리하다. 방콕, 치앙마이, 푸켓 등의 지역에서는 원스톱 업무처리와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태국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허바(Hubba)’는 디지털 노마드들의 코워킹 플레이스로 방콕내 3곳에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입주 스타트업을 위해 법률·투자 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높은 수준의 인력과 효율적인 IT 인프라를 보유한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열린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해외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국영 엑셀러레이터 MaGIC (Malaysian Global Innovation & Creativity Centre)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남아 최고 공유 차량 앱인 ‘그랩(Grab)’이 MaGIC의 주력 상품이다. 그랩은 소프트뱅크, 디디추싱, 알리바바, 혼다 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한 상태이다. MaGIC 프로그램은 참가 기업들이 목표 기간내 스타트업 멘토링과 투자자 파트너링을 거쳐 즉각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월 1,000링깃(약 26만원)의 생활비, 무료 숙박, 항공비 지원 등의 혜택을

21) 현재 4천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세우고 아시아 비즈니스 추진의 거점으로 활용 하고 있다.
 22)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으로 노트북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부여한다. 인도네시아는 휴양지인 발리와 수도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최근 구글,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로 아세안 유니콘 기업 7개중 3개(Go-Jek, traveloka, Bukalapak)를 보유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고젝(Go-Jek)’은 오토바이 공유서비스로 현재 인도네시아 10개 대도시에서 활동 중이며 이용자 수가 20만명에 달한다. 미국 대형 사모투자업체에서 5.5억달러를 투자받기로 하면서 ‘유니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0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숙박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야놀자’가 800억원,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을 소유한 ‘우아한 형제들’이 3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그쳤다²³⁾. IT강국으로 불리우던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발전속도가 오히려 더뎠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생태계가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아세안의 트렌드는 한국과 아세안 양측 모두에게 강력한 협력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5.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아세안 지역의 평균 인터넷 보급률은 53%에 달하며,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는 2010년 1.25억명에서 2015년 2.25억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3.39억명으로 늘어났다. 그 중 89%에 달하는 약 3억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59%인 2억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아세안의 각국 정부에서는 정체되어 있는 산업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IT산업 및 전자상거래(e-Commerce) 활성화 정책을 채택하고 세부 로드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8월 정부 차원에서 3개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비금융권 핀테크 거래 실적은 2016년 150억달러에서 2017년 19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2014년 태국 정부는 디지털 이코노미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동 정책은 하드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서비스 인프라, 디지털경제 촉진, 디지털 사회 등 5대 개선 분야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2036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2배로 증가(13,000달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공공전기·통신 서비스 사업 프로그램 강화, 국영 이동통신기업 민영화, 4G사업라이선스 발급 등 이동통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16~2020년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플랜’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류 인프라 및 결제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3) 중앙일보(2018.5.15), “1000억 유치 스타트업 ‘0’...동남아에 밀린 IT 한국”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확산, 정부의 육성정책 등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IT산업 및 온라인 시장은 연평균 32% 성장이 예상되는 등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아세안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286억달러였는데 그중 인도네시아가 82.1억 달러로 가장 크며, 태국 34.5억달러, 싱가포르 24.3억달러, 말레이시아 24.1억달러, 베트남 20.8억달러 순이었다.

〈표 14〉 아세안 주요 6개국 전자상거래 시장 현황

(단위 : 십억달러, %)

국가	시장규모 ('17년)	기대 성장률 ('17~'21년 CAGR)	주요 분야	정부 육성책
인도네시아	8.21	20.1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책, 비디오, 게임), 가전, 패션, 여행	3개년 전자상거래 로드맵('17)
태국	3.45	15.9	여행, 패션, 가전, 미디어	태국4.0, '17-'20년 전자상거래플랜
싱가포르	2.43	11.2	여행, 패션, 미용, 엔터테인먼트 & 라이프스타일, IT 가전, 보험	Industry Transformation Map, 디지털화 프로그램
말레이시아	2.41	23.2	여행,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가전, 패션	국가 전자상거래 전략 로드맵('16)
베트남	2.08	16.5	패션, 가전, 미디어, 음식	5개년 전자상거래 개발 마스터 플랜('16)
필리핀	0.06	17.3	가전, 식료품	5개년 전자상거래 로드맵('16)

자료 : eMarketer, Handbook on E-Commerce and Competition in ASEAN(2018) 참고하여 재정리

전자 상거래 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아세안 지역에서는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부상하고 산업 지형에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숙박 시설 및 항공권 예약, 육상 교통수단, 화장품, 패션 등의 분야에서 Airbnb, Uber, GoJek, Grab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비스업체는 쇠락하고 있다. SNS를 통한 마케팅이 증가하고,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등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통한 체험형 마케팅 기술들도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낮은 ICT 기술 수준과 관련 규제 미비는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²⁴⁾하고 있다. 2016년 기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하는 ICT

24) 2017년 기준 아세안의 소매판매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싱가포르(4.9%)를 제외하면 모두 4% 미만이다.

개발지수를 살펴보면, 아세안 평균(4.5)은 세계평균(4.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별로는 싱가포르(7.95), 말레이시아(6.22), 브루나이(5.33), 태국(5.18), 베트남(4.29), 필리핀(4.28), 인도네시아(3.86), 캄보디아(3.12), 미얀마(2.54), 라오스(2.45) 순이다. 광대역 인터넷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농촌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섬이 많다는 지형적 특성으로 물류·운송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아세안 지역의 현재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 및 규제 수준으로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거래내용을 완전히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국별로 상이한 역내 관세 정책, 선적(shipping)전 검사 및 가격 규제 등의 비관세 조치 등은 아세안의 국경간 무역 활성화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선진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등이 가장 시급하다 할 수 있겠다.

IV. 상생협력 방안

1.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도출

지금까지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경제 환경, 최근 트렌드와 그에 따른 협력 수요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세안 국가들은 대체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한 자금 부족 문제와 경영 및 기술 관련 전문 인력과 경험의 부족, 제도나 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한다. 반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의 성장이 정체²⁵⁾된 가운데,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면서 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도 대기업과 제조업 중심의 편중된 구조로 대외 변동성에 취약하고, 일자리 기여도는 하락²⁶⁾하고 있다. 따라서 現정부는 2018년 무역통상진흥시책을 통해 혁신·포용적 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서비스·소비재 등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적 투자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²⁷⁾이다.

신남방정책 시대의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즉 상호 수요에 기반하여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제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광범위한 협력수요를 고려하여

25) 주력산업 시장 점유율('12→'16, %): (자동차) 5.7→5.0, (철강) 7→7, (석유화학) 6.9→7.1

26) 취업유발계수('90→'14, 명/10억원): (수출) 58.6→7.1, (소비) 57.9→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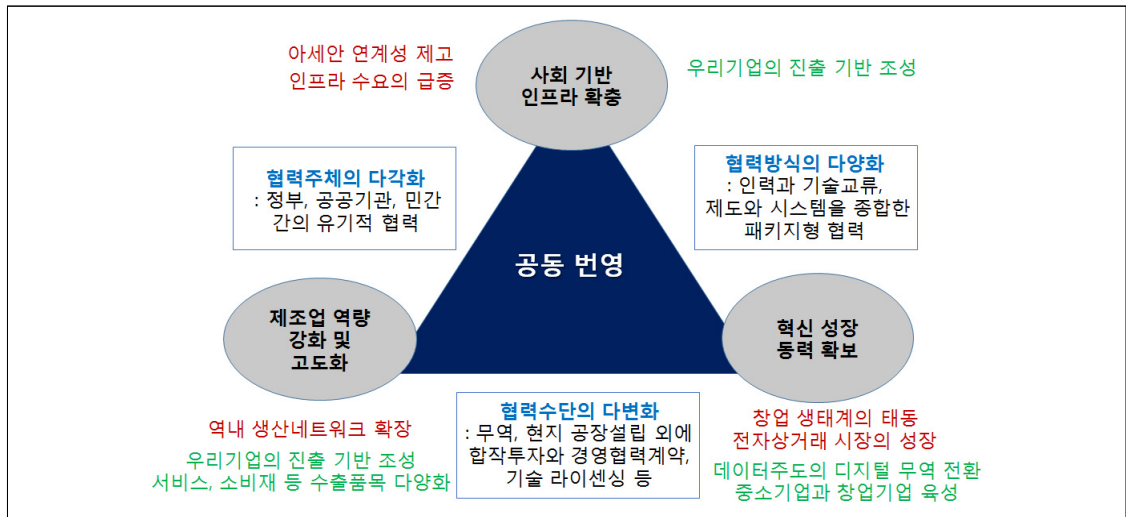
27) 산업통상자원부(2018), p.13-18

먼저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협력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 방법에 있어서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뿐만 아니라, 인력과 기술 교류, 제도와 시스템 전수 등을 종합한 패키지형 협력 형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제도 운영의 경험과 도시개발 노하우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력 수단은 단순무역이나 비용절감을 위한 현지 공장설립 등에 국한하지 않고, 합작투자과 경영협력계약, 기술 라이선싱 등 국가별 리스크를 완화하고 현지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하겠다.

〈표 15〉 아세안 경제공동체와 한국의 정책 목표(비전) 비교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	한국 신남방 정책의 비전
1. 고도로 통합된 경제 2. 경쟁력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아세안 3. 연계성 제고와 부문간 협력 4. 포용적·사람 중심의 아세안 5. 글로벌 아세안	1. 사람(People) - 다양한 계층의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확대 2. 상생번영(Prosperity) - 교통, 에너지, 수자원, 정보통신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선순환적 상호번영 모색 3. 평화(Peace) -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구축, 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그림 16〉 신남방정책 시대의 對아세안 상생협력 모델 구상



주 : 붉은 글씨는 아세안 수요, 녹색글씨는 한국의 수요

자료 : 자체작성

2. 협력 확대 방안

(1) 사회 기반 인프라 확충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연계성이 제고되고 있고, 역내 개별 국가에서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한동안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8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의 신남방정책 성과를 설명하면서 동지역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는 2018년 10월 기준 98.9억달러(전체 수주액의 40.9%)로 85.7억달러를 수주한 중동을 넘어서 최대 수주처로 부상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 국가와의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2018년 9월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2022년까지 1억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기로 하였다.

국내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평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6위²⁸⁾로서 1위인 미국 대비 77.8%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시장·제도 등 국가 차원의 지표로 구성된 건설인프라 경쟁력 점수는 82.1로 세계 12위를 차지하는 반면, 시공·설계·가격 경쟁력으로 구성된 개별기업의 역량평가 점수는 74.6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경제특구 건설, 산업단지 구축, 스마트시티 조성 및 발전소 건설 등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민간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해외사업 정보 공유, 입찰 공동참여 등 동반 진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관리 노하우 전수 및 전문 기술과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아세안과의 인프라 사업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사업의 경우 민·관협력사업(PPP) 방식으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 금융기관은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신디케이션 능력을 제고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PPP 관련 제도(입찰법, 외국법 적용 보장 여부 등)가 완전히 정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지 정부와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위한 협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개발자금(ODA)과 연계하여 우리 정부의 이미지 제고 및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

28) 국가별 글로벌 경쟁력 종합평가 점수 : ① 미국(100.0), ② 중국(82.7), ③ 스페인(80.4), ④ 독일(80.1), ⑤ 네덜란드(79.0), ⑥ 한국(77.8)

(2) 제조업 역량강화 및 고도화

한국 기업은 최근 산업집적지가 형성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아세안 역내 제조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생산 공장 설립 이후 베트남에서는 전자부품이 새로운 수출 주력상품으로 등장하면서 2017년 베트남 총수출의 38.7%를 차지하는 등 베트남 수출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철강 분야에서는 2016년 8월 포스코가 인도네시아에 열연공장을 추가 건설하여 2020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30억달러를 투자하여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2020년 착공할 예정에 있다.

우리의 제조업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베트남²⁹⁾은 투자분야가 전기·전자 분야 등 고부가가치화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으나,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할만한 부품·소재산업의 발달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동 부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기진출한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기업 활용도는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한-베트남 간의 무역불균형을 완화하고, 베트남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경우, 낮은 기술 수준의 단순 부품은 베트남 현지에서의 조달율을 높이고, 한국에서의 조달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기업들의 기술이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아세안에 진출할 때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의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들은 2, 3차 벤더가 대부분으로 R&D, 기술이전 및 인적자원 개발 역량이 부족하므로, 한국 정부와 KOICA 등과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은 거점 지역에서의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역량강화에 일조하면서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활발한 역내 무역과 분업화에 맞추어 생산 네트워크를 미얀마, 라오스 등 후발국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9) 1988~2017년 누계기준 한국의 베트남 투자액이 578.61억달러(6,549건)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다.

(3) 혁신성장 동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ICT기술이 핵심적인 경쟁 요소가 되고 있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ICT산업의 평균 기술경쟁력 수준은 미국(100%), 유럽(89%), 일본(86.9%)에 이은 4위인 80.5% 수준으로 미국과는 약 1.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³⁰⁾. 또한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스타트업들은 과거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³¹⁾이었으나, 최근 들어 창업 초기부터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R&D 인센티브 제공, 이자·조세 감면 등 전통적인 벤처기업 지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촉진하는 정책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내에서도 전통적인 제조산업 이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IC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분야 및 소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양방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상생협력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실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물류비용, 운송 인프라의 대도시 집중으로 전자상거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 당장 수익성을 실현하기는 어려우나, 진입장벽이 낮아 시장성 테스트와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다만 아무리 뛰어난 최신 IT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도 독자적인 아세안 시장 진출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현지 우량기업과의 업무 제휴 등을 통한 협력 강화로 시장 위험요인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제로웹’ 회사는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으로 베트남의 핀테크 기업 VNPAY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VNPAY사용자 1,000만명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 데이터를 확보·분석하고 있다. 또한 공동창업 및 공동 기술 개발로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을 개척해 볼 수 있는데, 국내 핀테크 플랫폼 전문업체 ‘핑거비나’는 베트남 현지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IT전문 인력을 수급받는 한편, 이들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현지 환경에 맞는 핀테크 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 다만 자체적인 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의 인허가, 제품통관, 물류, 파워벤더 발굴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30) 중국은 76.9% 수준으로 미국과 약 1.7년의 기술격차가 난다.

31) 협소한 내수시장이라는 유사한 한계를 지닌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은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경쟁을 염두에 두는 풍토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V. 맺음말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글로벌 유망 시장으로 더욱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아세안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회로 인식하고 시장을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아세안 진출이 지속되었으나 지금까지 ‘신남방정책’과 같은 확실한 아세안 외교 노선이 부재하였으며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진출 이라기보다 기업들의 대미우회수출이나 중국을 대체하는 저임금 제조 기지를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진출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우리의 對아세안 진출은 베트남, 제조업, 대기업 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되었으며, 교역관계에서도 한국의 무역 흑자만 확대되는 등 불균형상태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 한국과 아세안은 30여년 동안 경제관계를 지속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에 대한 구상이 처음 나온 이후 정부는 1년여 동안 활발한 정상외교³²⁾를 통해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여 외교·안보 지평을 확대하였으며, 지역별·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상생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TASK센터 및 관련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민간 벤처캐피털(VC)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신남방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8년 10월 기준 신남방 지역의 최대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처로 부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국과 아세안 협력관계의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지속·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남방정책’ 시대의 상생협력 원칙, 즉 한·아세안 양측의 수요와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 협력 주체와 협력 방식, 협력 수단을 다양화하여 유연하게 활용하는 협력 모델을 도출하고 여러 방면에서 성공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한·아세안의 상생협력을 확대할 분야로 사회기반 인프라 확충, 제조업 역량 강화 및 고도화, 혁신성장 동력 확보의 세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남방정책의 지속성과 적극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하여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아세안 재외공관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여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협력 사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및 산업 전문가의

32) 우리 정상은 인니·베트남·필리핀(17.11), 베트남(18.3), 싱가포르·인도(18.7) 양자 방문 등을 추진하였다.

확보로 지속적인 정보의 축적을 주도하고, 중소·중견 기업들의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적절한 활용도 필요하다. 최근 동남아시아에 보편화되어 있는 ‘한류’라는 정서도 전략적인 소프트파워로 지속적으로 확대·유지시키면서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아세안 상생협력을 통해 아세안 경제공동체로의 새로운 변화와 ‘한류’의 보급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혁신과 포용의 경제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굳건히 다져 놓아야 하겠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곽성일 외(2015),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KIEP _____(2016), “한·아세안 기업 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KIEP
- 나희량(2015), “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동남아시아 연구 25권 1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_____(2017), “한·ASEAN FTA 10주년 성과 분석”
- 대한무역진흥공사(2018), “2018 권역별 진출전략 - 동남아”
- 도현철(2018),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투자 동향과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 박준홍(2015), “떠로르는 아세안을 주목하라”, 포스코 경영연구원
- 배기현(2015), “아세안 연계성의 정치”, 국가전략 제21권 1호
-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도 무역통상진흥시책”
- 손혁상·최정호(2008), “한국의 대아세안(ASEAN)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동남 아시아연구 18권 2호
- 오인식(2002), “한국기업의 직접투자동기 및 경영애로 분석-베트남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비교 경제연구 제12권 제2호
-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주아세안대표부(2016), “한 눈에 보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주)휴먼컬처아리랑
- 이용화 외(2017), “POST China,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기회요인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이재호(2017), “아세안 연계성 최근 논의와 향후 전망”, KIEP
- 이재현(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
- 이진권(2015), “한국 중견 전자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전략 사례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
- 임희정(2015), “해외직접투자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 정지원(2018), “신남방지역에 대한 우리나라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 KIEP
- 정책기획위원회 보도자료(2018.11.8),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최경희(2016), “ASEAN 경제공동체 2025 비전과 쟁점”,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
- 최윤정(2018), “신남방정책과 상생협력형 해외진출 모델연구: 인도를 중심으로”, KOTRA
- 최윤정 외(2016),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과 과제: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KOTRA
- 중앙일보(2018.5.15), “1000억 유치 스타트업 ‘0’...동남아에 밀린 IT 한국”
- 한국무역협회(2018), “아세안 4개국 TIMS 스타트업 메가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영문자료]

ADB(2017),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port 2017”

ASEAN(2015), “Factsheet on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ASEAN Secretariat(2016),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

BMI Research(2017), “Global Infrastructure Projects Report : Pipeline Reaches New Highs”

BSA(2015), “Handbook on E-Commerce and Competition in ASEAN”

Mckinsey Global Institute(2014), “Southeast Asia at the crossroads : Three paths to prosperity.”

Mckinsey&Company(2017), “ASEAN Insights : Regional trends”

OECD(2018), “Economic Outlook for southeast Asia, China and India 2018”

Ponciano Intal, Jr. et al.(2017), “Voices of ASEAN : What Does ASEAN Mean to ASEAN Peoples?”, ERIA

Financial Times(May.28, 2018), “Mahathir vows deep cuts to save Malaysian economy”

[온라인자료]

국제무역위원회(ITC), <http://www.trademap.org>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http://www.unctad.org>

국제통화기금, <http://www.imf.org>

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아세안통계국, <http://www.aseanstats.org>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

헤리티지 재단, <http://www.heritage.org>

UN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